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16년째 ‘제자리’

낮은 임금·열악한 근무환경 호소 언어폭력·성추행 보호장치 없어 “민간영역에 일임한 국가 책임 커” 공정한 임금 가이드라인 등 필요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치매 환자를 비롯한 노인의 신체 활동과 가사 노동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수준과 근무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돌봄노동자들은 정부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인권 침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법 제정으로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최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호봉제 도입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처우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며 “10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요양보호사는 호봉제와 같은 급여 규정이 없어 신입과 경력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전업주부였다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7년째라고 밝힌 박선화(59)씨는 강압적인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노인 수급자와 언쟁이 생기면 일방적 해고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노인복지센터 입장에서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요양보호사는 해고해도 곧바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대체하

면 그만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요양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없다. 고용불안은 물론 돌봄 현장에서 언어폭력, 성추행 등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며 “1대1로 이뤄지는 근무 환경에서 이런 감정노동 피해를 대처할 보호 장치는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요양보호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국가가 돌봄을 민간 영역에만 맡겨두면서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은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처우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에서 만든 제도를 민간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관리·감독 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순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보호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현황과 연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합당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정했듯이 타당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회적 분위기도 요양보호사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전주연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 지부장은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돌봄노동자들에 관한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도입해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주려고 시도했다”며 “가사

노동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이 돌봄노동자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정부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임금 가이드라인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는 포함된 반면 요양보호사는 제외된 데 따른 비판도 거세다.

전 지부장은 “시간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조합비를 낼 형편도 안 되고 협회에 가입할 여력이 없다. 조합으로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다른 직종과 달리 요양보호사들에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며 “‘돌봄’이라는 근로 형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보편적 복지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5면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 미래차산단 그린벨트 연내 해제 추진

시, 국토부에 국가전략사업 신청 81만㎡ 제한… 12월 후보지 확정

광주시가 올해 내 미래차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지난 5일 열린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미래차국가산단의 그린벨트 해제 전제조건인 대체지 협의를 올해 내 마쳐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게 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빛그린 국가산단 인근 오운동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예정 부지 총 338만㎡ 중 95%에 해당하는 321만㎡가 그린벨트다. 이 중 국토부 환경평가 등급 3~5등급지 135만㎡는 조건없이 해제가 가능하고, 1~2등급지 185만㎡ 중 농지 104만㎡도 국토부와 계획 수립 및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 81만㎡는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야만 개발할 수 있다. 광주시는 대체지로 무등산 일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서’를 지난 5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확보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 75.4km² 중 49.8km²가 그린벨트로 지정됐고, 나머지 25.6km²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공유지인 북구 금곡동 일원 81만7108㎡를 그린벨트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광주시가 신청한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국토연구원원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노병하기자



민주당 영광터미널시장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민주당 곡성군수 후보, 이개호 국회의원 등이 23일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영광터미널시장을 찾아 시민

나건호기자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00명
아카데미 Leadership (포럼 7회)
일정 Friendship (체육 행사 2회)
Patronship (전시 관람 1회)
교육기간 2024.09-2025.05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세부 일정표

일자 및 회차	강사	분야
2024. 09. 26(목) - 포럼 1강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정치
2024. 11. 28(목) - 광주비엔날레 관람 및 만찬		
2024. 12. 12(목) - 포럼 2강	최철 조선대 교수·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예술
2025. 01. 09(목) - 포럼 3강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
2025. 02. 06(목) - 포럼 4강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	로봇 공학
2025. 04. 03(목) - 포럼 5강	이경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정보(AI)
2025. 05. 08(목) - 포럼 6강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서울과학대학원 교수	인문
2025. 05. 29(목) - 포럼 7강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사회

만찬 후 강연 (18시 식사, 19시 강연)